

■ 최신 법령 ■

[공정거래]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

박형삼 변호사 | 이병주 변호사

1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(고시 제2012-호, 2012. 10. 16. 시행)

-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합리화

가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 : 부과기준율을 기존 관련매출액 대비 1% 에서 2%로, 부과 기준금액(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)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

나.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 :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·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나,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의 노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

다. 조사방해에 따른 과징금 가중 규정 상향조정 및 세분화 : 기존의 경우 조사방해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30%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,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, 최대 가중 비율도 기존 30%에서 40%로 상향 조정. 예컨대 i) 폭언·폭행,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·지연의 경우 40% 이내, ii) 자료의 은닉·폐기, 접근 거부 또는 위·변조의 경우 30% 이내, iii) 기타 조사방해의 경우 20% 이내에서 가중

2. 다운로드 :

[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\(고시 제2012-62호, 2012. 10. 16. 시행\)](#)